

-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4. 8. 18.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14. 8. 04.
- 나. 발 의 자 : 신영은 의원(찬성자 17인)
- 다. 회부일자 : 2014. 8. 04.
- 라. 상정일자 : 2014. 8. 18.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신영은 의원
 - 검토보고 :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나.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는 개항과 근대문화의 선구지이자 60년대와 70년대에는 부평공단(경인공단)으로 대표되는 수출의 전초기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현재는 인구 294만명의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발전하였음.
- 지역적으로 서해에 위치하여 168개 유·무인의 섬으로 구성된 특성으로 일찌감치 항만도시로 발전하였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에는 전 세계 58개국 182개 도시를 88개의 항공사가 연결하는 국제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6개의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망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국방상으로는 서해 접경지역에 위치한 안보의 요충지이며 특히,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2011년 12월 이후 북한 김정은 권력체제 전환에 따른 불안정한 남북정세로 인하여 지역 안보의 중요성은 더하고 있음.
- 사회·경제적으로는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힘입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사무소 등 13개의 UN 및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고 외국인 5만 3천명이 거주하는 글로벌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도 지난 7월 10일에 국내 최고층 빌딩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가 준공되는 등 첨단시설의 초고층 빌딩이 날로 늘어나고 있음.
- 또한,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7개의 일반산업단지에서 9,407개의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송도 LNG 인수기지, 영흥화력을 비롯한 5개소의 화력발전시설이 입지하여 수도권 에너지원으로서 한국경제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는 정부와 민간의 불합리한 관행, 윤리의식의 부재, 민관유착 및 금전만능주의 팽배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관리 및 대응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 더구나, 2월 17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붕괴사고, 5월 2일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등 많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항만, 항공, 에너지, 물류, 교통, 산업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노후된 원도심이 산재한 지역 환경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증폭되고 있음.
- 안전은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인천광역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분야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 분야, 산업·경제 분야, 건설·교통 분야, 도시개발 분야, 항만·공항·해양 분야, 소방·재해·재난 분야 등 각 유관한 영역을 포괄하여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접근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다. 구성개요

-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 ※ 단,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가능
- 구성인원 : 13인 이내
- 활동내용
 - 자연·인적·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점검
 - 안전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정책·제도개선 모색
 -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및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 정부·국회 제도정비 건의

라. 대상부서

- 안전행정국, 경제수도추진본부,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항만공항해양국, 소방안전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교육청
 - ※ 특별위원회 구성후 대상부서 최종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우리 인천시는 항만, 항공, 에너지, 물류, 교통, 산업 등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된 원도심도 산재되고 있어 안전취약성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의 안전 분야의 행정력은 상황 관리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과 사고유형에 대한 통합적 관리도 미흡하며,
- 또한 중앙정부 방침에 맞춰 지난해 7월 안전행정국, 9월에는 안전총괄과를 각각 신설하였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음.
- 아울러, 최근 불거진 서구 SK인천석유화학, 송도 LNG기지 등 위험시설에 따른 주민 안전대책과 도시철도 2호선 및 아파트 건설현장 등 대형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처럼 우리 시의 안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시민들이 사회 전반의 위험으로부터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우리 시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특별위원회가 안전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활동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도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 활동 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시의 현실을 반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금년 개최되는 국제대회 기간 중에는 시 행정력이 집중되고, 의원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있는 관계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회 종료 이후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됨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이강호 위원

- 위원회별로 2명씩 추천을 받고, 나머지 3명은 의장 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이 바람직함

< 답 변 >

○ 신영은 의원

- 동의함

< 질 의 >

○ 유일용 위원

- 위원회 명칭에 “대책”을 넣는 것은 어떤지 ?

< 답 변 >

○ 신영은 의원

- 위원회 명칭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질 의 >

○ 정창일 위원

- 위원회에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전문가를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건의함

< 답 변 >

○ 신영은 의원

- 동의함

< 질 의 >

○ 김경선 의원

- 활동내용에 여객선 분야가 빠져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신영은 의원

- 국제항만에 대한 활동은 어렵지만 연안여객은 포함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오홍철, 유일용, 장현근, 김경선, 박병만, 박영애, 박종우
신은호, 이강호, 정창일, 허 준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11명)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1】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가. 인천광역시는 개항과 근대문화의 선구지이자 60년대와 70년대에는 부평공단(경인공단)으로 대표되는 수출의 전초기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현재는 인구 294만명의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발전하였음.
- 나. 지역적으로 서해에 위치하여 168개 유·무인의 섬으로 구성된 특성으로 일찌감치 항만도시로 발전하였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에는 전 세계 58개국 182개 도시를 88개의 항공사가 연결하는 국제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6개의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망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다. 국방상으로는 서해 접경지역에 위치한 안보의 요충지이며 특히,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2011년 12월 이후 북한 김정은 권력체제 전환에 따른 불안정한 남북정세로 인하여 지역 안보의 중요성은 더하고 있음.
- 라. 사회·경제적으로는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힘입어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사무국,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사무소 등 13개의 UN 및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고 외국인 5만 3천명이 거주하는 글로벌 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도 지난 7월 10일에 국내 최고층 빌딩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NEATT)가 준공되는 등 첨단시설의 초고층 빌딩이 날로 늘어나고 있음.

마. 또한, 3개의 국가산업단지과 7개의 일반산업단지에서 9,407개의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송도 LNG 인수기지, 영흥화력을 비롯한 5개소의 화력발전시설이 입지하여 수도권외 에너지원으로서 한국경제의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음.

바. 그러나,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는 정부와 민간의 불합리한 관행, 윤리의식의 부재, 민관유착 및 금전만능주의 팽배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관리 및 대응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사. 더구나, 2월 17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붕괴사고, 5월 2일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 5월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등 많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항만, 항공, 에너지, 물류, 교통, 산업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노후된 원도심이 산재한 지역 환경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증폭되고 있음.

아. 안전은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인천광역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관련 분야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자.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 분야, 산업·경제 분야, 건설·교통 분야, 도시개발 분야, 항만·공항·해양 분야, 소방·재해·재난 분야 등 각 유관한 영역을 포괄하여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접근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회를 구성하고자 함.

3. 구성개요

- 활동기간 :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 ※ 단, 필요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가능
- 구성인원 : 13인 이내
- 활동내용
 - 자연·인적·사회적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점검
 - 안전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정책·제도개선 모색
 -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및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 정부·국회 제도정비 건의

4. 대상부서

- 안전행정국, 경제수도추진본부,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항만공항해양국, 소방안전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교육청
 - ※ 특별위원회 구성후 대상부서 최종 결정

5. 세부활동계획

- 특별위원회에서 수립·의결

6.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5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